

## “전직 광주시장 아들 땅 용도변경 특혜 사실로 확인”

광주시, 토지매입 과정·심의위원회 명단 유출 등 과정 내부 조사  
강기정 시장 “용도변경 특혜 등 많은 의혹 사실일 가능성 높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켜본 뒤 자체 감사 및 수사 의뢰·고발 하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 소유한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토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본보 6월 26일·7월 5일·7월 10일자 1면, 7월 4일자 2면)과 관련, ‘내부 확인 결과, 실제 많은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일단 광산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고된 만큼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광주시 자체 감사와 수사의뢰 후 추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논란이 된) 용지 매입, 심의위원회 명단 유출 등 해당 용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많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8년 3월 산업 용지 매입 당시 입주 절차, 용도변경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유출 경위와 외압 유무, 명단 유출의 책임 등 3가지 문제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 소촌농공단지 내 광산구 소촌동 831번지 제조시설(공장) 용지 4500㎡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취득·매입 관련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단지 용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양수 과정부터 입주 때까지 관리기관(광산구)의 신고·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광주시와 광산구를 거쳐 지원시설 용지(상업시설)로 용도 변경까지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광주시 담당자는 지원시설 변경을 반대했던 1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셀프 유출’하고, 되레 명단유출을 핑계로 전체 위원을 교체하기도 했다. 결국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24개의 조건을 달아 용도변경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광주시 안팎에서 이미 1차 위원회를 진행한 이후 외부로 공개된 위원명단을 놓고 ‘유출에 해당하느냐’란 의문 제기와 함께 ‘전체 위원을

교체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아예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단 유출을 이유로 심의위원 전체를 교체한 배경을 놓고 공무원 개입설 등 각종 의혹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도 현재 이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 과정의 적절성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시는 또 광주일보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용도변경 과정에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개발계획·관리기본계획·실시계획(지구단위 계획 포함) 등 필수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부분과 소촌농공단지 내 지원시설 면적을 초과하면서까지 용도 변경을 최종 승인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범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도 이날 이 같은 여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다만 (광산구 요청에 따라) 감사원 일반 감사, 공익 감사 등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자체 감사나 수사 의뢰, 고소·고발 등은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시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광산구에서 청구한 공익 감사가 (수사 이유) 실시되지 않을 수 있고, 특혜 의혹에 민간인과 퇴직한 공직자 등이 관련될 가능성도 있어 시에서는 감사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감사원에서는 민간인도 감사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수사의뢰 등 추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직 광주시장 아들은 2018년 3월 19억 5000만원을 주고 소촌농공단지 내 일부 공업용지를 구입한 뒤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광산구 승인 등을 거쳐 지난 4월 공장용지에서 산단 지원시설로 변경했다. 이 같은 용도변경을 통한 땅값 상승분만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의 식수원 화순 동복댐이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10일 현재 저수율 90.49%를 기록하는 등 만수위에 도달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식수원 동복댐 2년만에 저수율 90%

주암댐 저수율은 48.3%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광주 식수원인 화순 동복댐 저수율이 2년 만에 90%를 돌파했다. 10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복댐 저수율은 90.49%를 기록했다. 저수량은 8322만6000㎥이다.

지난 9일 저수율은 90.68%로, 2021년 7월 6일 99% 이후 2년 만에 90%를 넘어섰다.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4월 최저인 18.28%까지 떨어져 바닥을 드러냈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6일 30.84%를 기록한 뒤 일주일 만에 48%p가 상승하는 등 저수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광주시는 홍수 기에는 댐이 넘치지 않도록 저수율을 86% 이하로

관리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하루 30만t에서 120만t을 방류하는 등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또 다른 식수원인 주암댐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48.3%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장마철 잦은 비로 유입량이 크게 늘었지만 댐 규모 자체가 커 저수율 증가 속도는 동복댐 대비 더딘 모습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상 상황과 하류 상황에 따라 하루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다”며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한·일외교장관, 이번주 만나 ‘오염수’ 논의

한일 외교장관이 오는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만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은 자카르타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자회의 계기에 열리는 양자회담은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의제도 조율하지 않은 채 열리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낸 오염수 해양 방류가 양국 간 핫이슈인 만큼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야시 외무상은 IAEA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정부가 최근 공개한 오염수 검토 보고서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IAEA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자체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은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확정된 뒤에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         |
|------------------------|---------|
| 월세 못 내 취약계층 수십명 쫓겨날 처지 | ▶6면     |
| 굿모닝 예방 - 목포 9味·템플스테이   | ▶18·19면 |
| 신지애, US 여자 오픈 골프 준우승   | ▶22면    |

# 2023년 전라남도 SOC확충 올해도 지속된다!

2023년 국고예산, 역대 최대 8조 6,525억원 확보!  
정부의 SOC예산 축소 기조 속에서도 7년 연속 1조원 이상 국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로 전남 SOC 르네상스 시대 열다!

전라남도  
JeollaNamdo